“국가기관으로” “법인에 위탁” 갈등 하루빨리 매듭 지어야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② 운영주체 논란

정부 개정안 밀어붙이기
지역 국회의원·문화단체
보완 법안 마련 ‘제동’
운영 인력도 못 뽑아
차질없는 개관준비 나서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전경. 왼쪽 대형유리로 마감된 건물은 아시아예술극장의 입구이고 옆 건물은 문화창조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는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순항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그 운영주체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거진 운영 주체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전당을 운영할 조직구성에 차질을 빚게하는 등 문화전당 개관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6월 현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재)아시아 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은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당을 특수법인에 위탁하면 효율성을 추구해 공공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전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개정을 밀어붙여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문화단체 등은 최근 정부의 개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 지역의 여망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애초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민들의 여망과 달리 문화전당의 전체 운영을 법인에 맡기려는 데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법안 개정작업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지만, 언제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문화전당 운영주체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이 미뤄지면 개관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현재 문화전당 주무 부처인 문화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이 오는 2015년으로 잡혀져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전담인력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용역에 따르면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문화창조원·정보원·어린이문화원·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용인력은 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문화전당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인력선발이 어려워지자 현재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문화전당 개관업무를 맡겨놓은 실정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원래 문화전당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유통·관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었으나, 문화부가 문화전당 운영조직을 꾸릴 수 없게 되자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 등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최근 문화전당 법인위탁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문화부와 추진단이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꾸리지 않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문화부는 광주지역사회의 여망을 받아들여 문화전당 운영주체 논란을 매듭짓는 짓고 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수도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부안과 광주지역사회안

〈자료:박혜자 국회의원실〉

	정부안	지역 사회안
설립	국가는 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국가는 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제27조 1항)
기구 소속	문화전당은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문화전당은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두되, 문화전당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27조 2항)
재정 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아시아 문화원	문화부장관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해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한다.	문화부장관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한다. (제28조)
운영 주체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민주당, 호남 사수작전 나선다

내주 초 광주서 최고위·호남의원 워크숍

민주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에 대비, 소위 ‘안방’으로 불리는 호남 사수작전에 나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흔들리면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그 여파가 확산하면서 제1야당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와 전남·북 의원들이 오는 21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어 광역단체장 선거 등 지방선거 전략을 포함, ‘안풍’ 차단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모임은 전북의 최규성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 의원은 광주 6명, 전남 10명, 전북 10명 등 총 26명으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최 의원은 14일 “1월에 국회 일정이 없어 편안하게 식사를 하자는 자리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안 신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호남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역 의원들도 그동안 몇 차례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추후 논의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내주 초 다시 광주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오는 20일께 광주를 방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17일 광주를 방문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보름여만의 방문으로 안 의원 측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번 광주 방문 때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상향식 개혁공천으로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신당, 지방선거 전 창당 시사

이계안 “설 전에 의미있는 말씀 드리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14일 창당 일정에 대해 “설 전에 국민께 의미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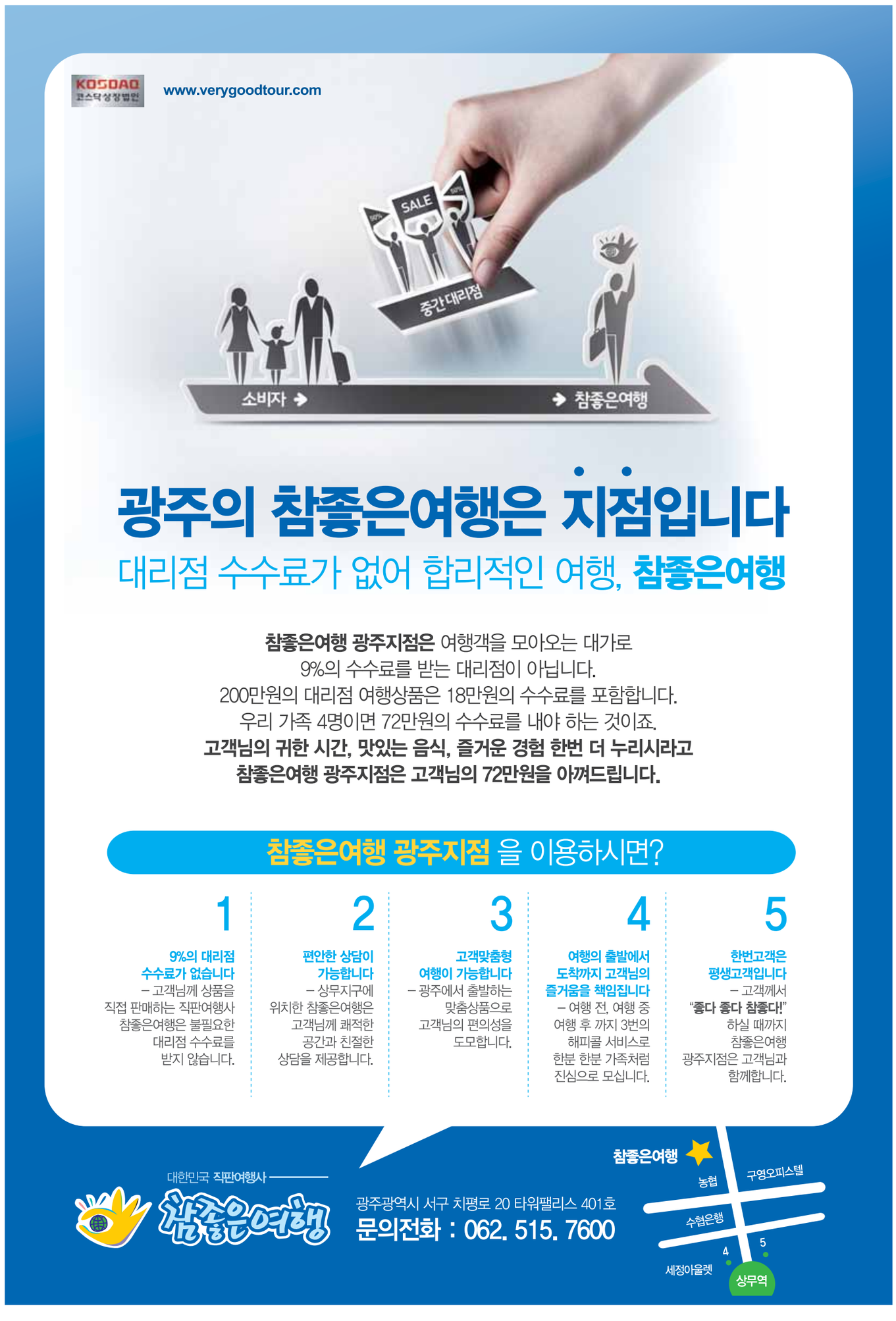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정추를 발족할 때 안 의원이 6·4선거에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6월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인물 영입에 대해서는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안 의원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고 능력있는 인물을 모실 수 있는가 고민”이라며 “외부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문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치 지망생들이 움직이는 것이 예민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새정추의 대구시장 후보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몸을 던진 훌륭한 정치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정추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 소속이라 영입 대상이라는 말을 하기는 부적절한 때”라면서 “민주당이란 것이 박 시장한테 군인 신분을 나타내는 유니폼인지, 무대에 올라가서 입고 있는 무대 의상인지는 아마 본인이 고심하실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위원장 자신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에는 “현 시점에서는 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 거취는 당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